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39호

체육시민연대 성명서

**조재범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언론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멈추고 경거망동을 중단하라!**

서울특별시체육회 블로그 베러 투모로우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가는 길

홍덕기 경상대학교 교수

대한빙상연맹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체육시민연대 “조재범, 성폭행 2차 가해 중단하라”

추상철 뉴시스 기자

[2021 국감] 심석희 사건, 개인 너머 체육계 인권문제...현실은?

조서영 시사오늘, 시사IN 기자

학생선수 관련 이슈

故 최숙현 사건 이후,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310명

이수용 위클리오늘 기자

운동부 학생들 발목잡는 교육부 지침, “학교 이탈 움직임도”

박한솔 경기신문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www.sportscm.org

보도자료



배 포 2021년 10월 20일(수)

보도일시 2021년 10월 20일(수)

전 화 02) 2279 - 8999

홈페이지 www.sportscm.org

성명서

조재범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언론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멈추고 경거망동을 중단하라!

성폭력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심석희 선수의 문자 메시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조재범 전 코치(이하 '가해자'라 함)는 재판 도중 심석희 선수(이하 '피해자'라 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고의충돌'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심을 품고 피해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위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는 해당 선수와 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16일 조사위원회를 꾸려 고의충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이 사태에 대한 일말의 윤리의식도 없이 원 사안과 관계없는 성범죄 1심 재판 판결문까지 퍼 나르며 인권침해성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는 가해자가 자신의 성범죄에 대한 재판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측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피해자를 흠집 내고 여론을 선동하여 자신의 중대한 범죄사실을 희석하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전달된 후 피해자의 고의충돌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는 가해자의 성폭행 등 범죄사실과 별개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과 관계없는 사적 정보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되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또한 피해자를 미성년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및 성폭행한 범죄자가 피해자의 인성을 운운하며 자신의 중죄를 희석하려는 시도를 앞다투어 보도하는 각 언론사의 행태에는 문제가 없는지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

성폭력 피해 상황과 피해자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아니다. '빠름'보다 '바름'을 추구하는 보도 정신을 갖는 것이 2차 가해를 막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가해자가 재판 중에 피해자에게 가한 2차 가해, 대한빙상연맹과 언론이 피해자에게 가한 2차 가해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가해자 조재범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 자신의 중죄를 참회하라!

하나, 대한빙상연맹은 가해자 조재범의 보복성 2차 가해에 대한 부화뇌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하나, 언론은 인권 보도 준칙과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2차 가해를 멈춰라!

2021.10.20.

체육시민연대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가는 길

테두리 바깥에서 일상의 한가운데로 녹아드는 스포츠

국가는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정부에서는 1962년부터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날'로 정해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유는 명료하다.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글 · 홍덕기



'스포츠 강국'의 이면

스포츠 강국 패러다임은 소수의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국제대회 메달 획득(국위선양의 일환이라고 불린다)을 위한 국가 체육 진흥 정책의 하나로 지난 반세기 가까이 이어졌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며 이 스포츠 강국 패러다임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가장 큰 문제는 승리 지상주의로 인한 폐해. 승리 지상주의는 소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기형적 스포츠 구조를 형성했다. 단기간의 입상 실적을 위한 과도한 훈련은 선수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혹사하는데 좋은 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로 이어졌다. 상명하복식 문화는 폭력의 대물림을 유지하도록 기여하고, 무엇보다 체육계를 인권 침해에 취약한 환경으로 만들었다.

누구든 누릴 수 있는 보장된 권리

한국의 스포츠 정책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스포츠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 중 하나이며 없어서는 안 될, 꼭 지켜야 하는 권리다. 체육교육, 신체 활동 및 스포츠에 관한 국제헌장(1978/2015)은 1조에서 '스포츠의 실천이 모든 이를 위한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2조 '스포츠는 개인,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4조 '스포츠 프로그램은 평생 지속적인 참여를 증진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스포츠는 교육적·사회적·공동체적 가치뿐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스포츠를 충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기존에 스포츠의 테두리 바깥으로 소외되어 온 대상을 중심으로 스포츠의 공공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다음 장 계속



새 시대를 위한 과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신체적 건강과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적 차원의 스포츠 활동 참여 과정에 자발성·민주성·개방성 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타인을 존중하고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다양성 존중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현장 곳곳에 모두를 위한 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기존에 스포츠의 테두리 바깥으로 소외되어온 대상을 중심으로 스포츠의 공공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기존의 생활스포츠는 성인, 남성, 중산층과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활성화해왔다. 스포츠계에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적 구조와 위계 문화는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이제는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등 스포츠에서 소외되어온 다양한 계층이 고르게 스포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운동 기능 수준 또는 인기 종목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재미를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복원하는 것 역시 스포츠가 지닌 고유의 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클럽법 등의 제정 논의는 반가운 일이다.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적 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쉽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마련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 역시 중대한 과제다.

국제대회에서의 엘리트 스포츠 경기력이 곧 국가의 스포츠 성장 척도를 대변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기존의 ‘스포츠강국’ 패러다임과 단호히 결별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이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을 쓴 **홍덕기**는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미국 노던 아이오와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며 한국 스포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라톤을 좋아하며, 스포츠·교육·인권에 대해 관심 있다.

체육시민연대 “조재범, 성폭행 2차 가해 중단하라”

스포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에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조재범 전 코치는 재판 도중 심석희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문제 메시지를 얻어 피해자 음해 목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사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흠집 내고, 여론을 선동해 자신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희석하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피해자의 '고의 충돌'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는 가해자의 성폭행 등 범죄 사실과 별개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전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일부 언론은 이 사태에 대한 일말의 윤리의식 없이 현 사안과 관계없는 성범죄 1심 재판 판결문까지 퍼 나르며 인권 침해성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과 관계없는 사적 정보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돼 언론이 공개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또한 피해자를 미성년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및 성폭행한 범죄자가 피해자의 인성을 운운하며 자신의 중죄를 희석하려는 시도를 앞다퉈 보도하는 행태에 문제가 없는지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성폭력 피해 상황과 피해자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아니다"면서 "조재범은 2차 가해를 멈추고 자신의 중죄를 참회해야 한다. 언론도 인권 보도 준칙과 윤리강령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해 연대는 "가해자 조재범의 2차 가해에 대한 부화뇌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 A코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동료 비하와 고의 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논란은 심석희를 상대로 3년여 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코치 측이 법정에 제출했던 '변호사 의견서' 내용이 한 매체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빙상연맹은 심석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에서 최민정(성남시청)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2021 국감] 심석희 사건, 개인 너머 체육계 인권문제... 현실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는 '체육계 폭력·성폭력'다. 올해도 어김없이 체육계 인권 문제가 대두됐다. 이는 지난 국감에서 점검한 대응책이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1일 간의 감사 기간이 무의미하지 않으려면, 그저 공허한 질의와 답변을 넘어서야만 한다.

2018년, 심석희 선수가 고발한 '빙상계 카르텔'



체육계 인권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18년이다. 2018년은 6년 만에 체육 단체만의 국감을 실시한 해였다.

이러한 배경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용기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천 선수촌을 방문하던 날 심석희 선수가 훈련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폭력 및 강제추행·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해 국감장에는 전명규 전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심석희 선수를 추종하는 이들을 나 이거 못하겠다고, 정신 병원에 갈 정도로 압박을 가하라'는 얘기가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전 전 부회장은 "(본인의 목소리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조재범 전 코치에게 실적 압박 및 폭력 증용한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이 선고됐으며, 현재 3심에 상고돼있다. 반면 전명규 전 부회장은 그 이듬해에야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직위 해제됐다.

2019년, 정치권 파행이 지연시킨 '운동선수보호법'

2019년 1월, 당시 안민석 문체위 위원장 및 소속 위원들이 이른바 '스포츠 미투법', '운동선수보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포츠 지도자의 폭행·성폭행 예방 의무 교육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형 받은 지도자의 영구 자격 박탈 △형 확정 이전, 선수 보호 위해 지도자 자격 무기한 정지 가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재범 전 코치는 법적으로 지도자 재취업이 불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법안의 핵심은 기존 대한체육회 소속 징계위원회를 '스포츠 윤리센터'로 독립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정확히 1년이 걸렸다. 2019년 국회의 파행이 거듭되며, 수많은 법안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제20대 국회의 파행이 1년간 체육계에 내재된 피해를 키워갔다.



2020년 6월, 체육계는 또 한 번 안타까운 사건을 마주했다. 故 최속현 트라이애슬론 선수는 동료 선수와 감독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의 나이는 스물셋, 1998년생이었다.

2019년 1월에 운동선수보호법이 바로 통과됐다면 어땠을까. 법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스포츠 윤리센터'는 최속현 선수의 죽음 이후인 2020년 8월에야 출범했다. 기존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스포츠 비리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와 같은 민원 기관을 통합해 개편된 것이다.

그러나 민원 이관 문제로 스포츠 윤리센터의 실효성이 논란됐다. 당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 중 약 20%(16건)만 이관이 결정되고, 나머지 79.2%(61건)는 추후 이관여부 검토 또는 자체 종결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한체육회 산하 인권센터가 신고를 받고도 처리하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킨 기관에 직접 조사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김예지 의원이 윤리센터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해 처리하지 않은 사건은 총 37건이었다.

2021년, '스포츠 윤리센터'는 역할을 다하고 있나?

스포츠 윤리센터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다. 윤리센터는 체육계의 문제를 해결할 소임을 다하고 있을까. 올해 국감장에서는 스포츠 윤리센터의 부실한 실적과 부정 채용 정황이 떠올랐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스포츠 윤리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로 '문체부의 부실한 지원'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40명이 배치된 스포츠 윤리센터의 2021년 예산이 53억 원인데 비해 38명으로 비슷한 규모인 도핑방지위원회는 80억으로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리센터의 필수 인력인 변호사는 4번의 채용 공고 끝에 채용했다. 올해 6월까지 심의처리완료 건수가 낮았던 이유는 7월에야 변호사 채용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예산 부족으로 변호사 인건비를 낮게 책정해 응시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윤리센터가 조사 권한만 있고 징계권이 없다는 점이다. 징계권이 없다면, 센터가 조사를 통해 징계를 요구해도 이행이 되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징계가 완료된 것은 2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1건은 일부 수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부정 채용'을 문제로 봤다. 윤리센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잘못된 보훈 가점에 따라 1·2등의 순위가 바뀌어 채용됐으나, 관계자들은 경징계에 그쳤다. 배 의원은 "스포츠 윤리센터는 스포츠 비위를 근절하는 기관 아니냐"며 "새로운 기구 출범에 가담했던 5명 중 2명이 징계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부정 채용 의혹이 있었는데, 너무나 가벼운 경징계로 넘어가려 했으며, 떨어진 분에 대한 어떠한 구제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운동부 학생들 발목잡는 교육부 지침, “학교 이탈 움직임도”

교육부가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출석인정 결석일수를 줄이자, 오히려 이같은 지침이 대회참가 등 운동부 학생들의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서 기존 63~64일이던 출석인정 결석일수를 초등학생은 20일, 중학생 30일, 고등학생 40일로 대폭 축소했다. 이어 올해에도 초등학생은 10일, 중학생 15일, 고등학생 30일로 줄였다.

최근 3년 사이 결석 허용일수가 대폭 감소하자 운동부 학생들 사이에선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1년 동안 1~2개의 대회를 참가한다면 사실상 현재의 결석 허용일수로는 무단결석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테니스 운동부 학생이 오는 11월 예정된 2021년도 김천오픈 추계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를 참가하게 될 경우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을 제외하더라도 6일이 소모된다. 즉 한번 대회를 참가하면 결석 허용일수의 절반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자 운동부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를 이탈하는 움직임도 감지되는 것은 물론, 최근 관내 운동부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에 축소된 결석 허용일수가 한몫한다고 체육계는 보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도에 운동부 835개팀, 2020년도에는 784개팀, 올해는 762개팀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결석 허용일수를 더욱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동부 학생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용인 한 운동부 코치는 “5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큰 제약은 없었다”며 “최근 들어 여러 제약이 많아지며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체육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8년도부터 운영 중인 G-스포츠클럽을 통해 운동부 학생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G-스포츠클럽은 학교와 지자체가 체육인프라 통합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습권이 인권과 결부돼 있다는 교육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결석허용일수가 축소된 것이다. 아마 정책의 방향에 따라 매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반학생들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 당연히 운동부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다. 학교자체에서는 선수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는 G-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故 최숙현 사건 이후,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310명

故 최숙현 사건 이후, 전국 학생선수 55,42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서 310명의 가해자가 조치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해임된 가해 지도자는 5명, 피해 학생과 분리된 가해 학생 수는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가해자 310명에 대해 조치 완료가 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는 9건에 그쳤다.

지난 2020년, 故 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55,425명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폭력 피해 응답 학생선수는 680명이 860건의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폭력 피해 860건은 신체폭력 412건 언어폭력 367건 성폭력 26건 기타 폭력 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는 총 519명으로 학생선수 338명, 체육지도자 155명, 교사 7명, 기타 1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부는 조치 불요를 제외하고 77명의 체육지도자와 233명의 학생선수를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밖 16명을 제외한 학교안 체육지도자 61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5명에 불과했다. 대다수인 33명은 주의·경고·견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선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8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조치는 1호 20명 2호 1명 3호 4명 5호 5명 8호 4명 조치없음 25명 학교장 종결 1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세부자료 확인 결과, 교육부 결과 대비 5명의 가해 학생선수 오차가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故 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엄정한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치 완료된 학생지도자와 가해 학생선수 310명 중 '해임·전학' 처분으로 피해학생과 분리된 건은 9명에 그친다”며 “교육부가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체육계 폭력 행태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학생과 가해자에 대한 공간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포츠인권센터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스포츠 문화와 구조의 변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한 조례개정 절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9478>

체육시민연대 "조재범과 일부 언론, 성폭행 2차 가해 중단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0130600007?input=1195m>

언론인권센터 “무책임한 심석희 2차가해 보도 중단해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98>

경기도, 25일까지 스포츠 인권교육 등 수행 위탁사업자 공모

<https://www.news1.kr/articles/?4465109>

스포츠 융복합 허브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26일 개소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4019900053?input=1195m>

강원도, '위드 코로나' 대비 '뉴노멀' 스포츠 행사 개최

<http://www.kvnnews.co.kr/nview.asp?aid=221102300006>

성인 52% "위드코로나 기대돼"…영화·스포츠 관람이 1순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2_0001623457&cID=13001&pID=13000

스포츠와 기업, 탄소 감축 '간부' 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5838.html

체육진흥공단, 22일 2021 스포츠산업 콘퍼런스 개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0_0001620481&cID=10501&pID=1050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